

새정부 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전략

- 일 시 : 2013년 1월 18일(금) 10:00~18:30
- 장 소 :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5층(제주상공회의소)
- 주최·주관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새정부 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전략

□ 개최 목적

-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롭게 수립될 중앙 정부 정책기조와 핵심정책(공약) 등에 대한 제주지역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 새정부 주요정책과제에 제주지역 현안 사항 및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아젠다가 반영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논의
- 특히 신공항 건설 등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항 등 대선 공약 등이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제주지역 현안과제들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세계환경수도 등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중앙 정부의 정책방향을 전망하면서 관련 핵심 사안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

□ 개요

- 일 시 : 13. 1. 18(금) 10:00 ~ 18:30
- 장 소 :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5층(제주상공회의소)
- 주 최 및 주관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주제 : 새정부 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전략
 - 기조강연 :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

- 주제발표1 :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
- 주제발표2 : 지역산업 및 신성장산업 육성 분야
- 주제발표3 : 사회복지·여성 분야
- 주제발표4 : 제주지역 핵심공약 반영전략

□ 행사 프로그램

진행 : 박원배 연구실장

구 분	시 간	담 당
등 록	9:00~10:00	참석자 등록
개회사 및 축사	10:00~10:10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기조강연	10:10~10:50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 - 발표자 : 박광국 한국행정학회 회장
휴식	10:50~11:00	Coffee Break
주제발표 1	11:00~12:20	새정부에서의 지식기반집적지 제주 전략 - 발표자 :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찬	12:20~14:00	
주제발표 2	14:00~15:20	새정부 산업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과제 - 발표자 : 송우경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휴식	15:20~15:30	Coffee Break
주제발표 3	15:30~16:50	새정부의 사회복지·여성분야 정책과 과제 - 발표자 :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휴식	16:50~17:00	Coffee Break
주제발표 4	17:00~18:20	제주지역 핵심 공약 반영을 위한 전략과 과제 - 발표자 :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폐회	18:20~18:30	사회자

□ 주요 내용

-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항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면서 논의 유도
 - 첫째, 새정부 정책 및 당선자 공약과 연계할 수 있는 제주지역의 공약사항 활용 전략
 - 둘째, 새정부(인수위)의 정책기조 및 대선 공약 및 아젠다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이슈 및 현안사항 대응 전략
 - 셋째, 새정부 주요과제에 제주공약이 포함될 수 있는 전략과 향후 5년간 중앙 정부 정책으로서 권한과 예산이 수반 될 수 있는 정책 발굴
 - 넷째, 새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방향 모색

□ 참석자(좌장, 발표 및 토론)

- 기조강연 :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
 - 박광국(한국행정학회 회장)
- 1주제 : 지역경제 및 일자리 분야

분 류	참 여 자	비 고
좌 장	김형길(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표자	새정부에서의 지식기반집적지 제주 전략 정수연(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김동욱(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하천수(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고태호(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2주제 : 산업정책 및 신성장산업 분야

분 류	참 여 자	비 고
좌 장	강기춘(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	새정부 산업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과제 송우경(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이남호(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창숙(제주 TP 기획조정실장)	
	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3주제 : 사회복지·여성분야

분 류	참 여 자	비 고
좌 장	박상수(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발표자	새정부의 사회복지·여성분야 정책과 과제 김성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홍연숙(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고보선(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4주제 : 제주지역 핵심 공약 반영 전략

분 류	참 여 자	비 고
좌 장	김성준(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표자	제주지역 핵심 공약 반영을 위한 전략과 과제 강철준(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토론자	고충홍(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원철(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훈석(제민일보 편집부국장)	
	김명범(새누리당제주도당 대변인)	
	고유기(민주통합당제주도당 정책실장)	

목 차

■ 기초강연

-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

박 광 국 (한국행정학회 회장) 13

■ 1주제 : 지역경제 및 일자리 분야

- 새정부에서의 지식기반집적지 제주 전략

정 수 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7

■ 2주제 : 산업정책 및 신성장산업 분야

- 새정부 산업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과제

송 우 경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63

■ 3주제 : 사회복지·여성 분야

- 새정부의 사회복지·여성분야 정책과 과제

김 성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85

■ 4주제 : 제주지역 핵심 공약 반영 전략

- 제주지역 핵심 공약 반영을 위한 전략과 과제

강 철 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127

개 회 사

지혜를 상징하는 뱀의 해가 시작된 지도 보름이 지난 요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출범에 따른 제주의 선제적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오늘 제16회 제주미래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사를 공동주최해주신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장과 김형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님께 감사드리고, 기조강연을 해주실 박광국 한국행정학회 회장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님, 송우정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님 그리고 각 세션 토론행사를 해주실 좌장님과 토론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정부의 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인수위 활동은 향후 박근혜정부의 5년간 국정 로드맵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로서 지역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국가 및 지역의 미래를 여는 매우 중요한 청사진으로서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른 국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제주의 핵심과제 및 크고 작은 현안들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타 지역보다 10년이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는 동아시아 허브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지역특화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적으로 인증된 자연환경모범도시로서 대한민국과 제주가 동반성장·발전할 수 있는 차별적 경쟁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만의 차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정부 정책방향과 국정 로드맵과 연계되는 제주의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 실현에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비롯하여 제주의 세계적 브랜드를 활용하여 제주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사업 등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주미래포럼이 제주의 현안 및 핵심과제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리개발의 장이 되고, 특히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공동개최해주신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장과 기조강연, 주제발표 및 토론에 선뜻 나서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계사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18일

제주발전연구원장 양 영 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우선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 제주지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와 함께 오늘 뜻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특히, 기조강연을 해주시는 박광국 한국행정학회장님을 비롯한 좌장, 주제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제18대 대선 결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다음달 25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새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 정책기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제주지역의 주요 정책과 공약, 핵심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안하고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1%의 한계를 뛰어 넘어 제주발전을 위한 핵심의제와 각종 공약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 도의회, 경제계, 학계, 정치권, 시민사회 등 모든 도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 통일된 의견을 인수위원회와 새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도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훌륭한 정책의제와 좋은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동주최측인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와 참석자 여러분, 기조강연자를 비롯한 좌장, 주제발표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 용 범**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함께해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위해 수고해주신 제주발전연구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우리 지역의 현안 과제와 박근혜 당선인의 지역공약 등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불필요한 정책혼선을 만들지 않는 차원에서 사실상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비공개에 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운영 기조와 정책을 미리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의 노하우가 매우 큰 뒷받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동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청사진을 세우고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한 노비자, 부동산영주권제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내국인면세점 운영 등의 특례를 활용해서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해왔습니다.

또한 환경자원이 세계적으로 인증된 환경모범도시로써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발전하고 커지면 그만큼 대한민국 역량도 커질 수 있다” 면서 “힘을 합쳐 제주도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 고 하셨던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10월 17일 제주선대위 발대식 말씀 등을 종합했을 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논리와 명분을 제시해 나간다면 충분히 새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합니다.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제주와 새 정부간 협력의 틀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관광허브를 위한 인프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4.3, FTA 대응과제, 녹색성장산업의 세계적 표준모델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 제주 6대 현안과 당선인 제주공약을 중심으로 오늘 전문가 여러분께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국정과제 반영에 좋은 방안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 형 선**

기조강연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

박 광 국

(한국행정학회 회장)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 방향과 과제



INDEX



CONTENTS 1 : 국내외 환경변화 전망



CONTENTS 2 :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방향



CONTENTS 3 : 지방분권정책의 핵심과제들



CONTENTS 4 :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네트워킹 조직체계 구축

공군 호국영훈 포상 증서 수여와 전마



1

CONTENTS



1. 국내외 환경변화 전망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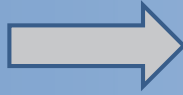
- 유럽의 금융위기
- 미국의 재정절벽
- 중국경제의 성장률

한국경제의 저성장 및 악화가능성

- 연 3%대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전망

우리사회의 변화

인터넷 사회



스마트 사회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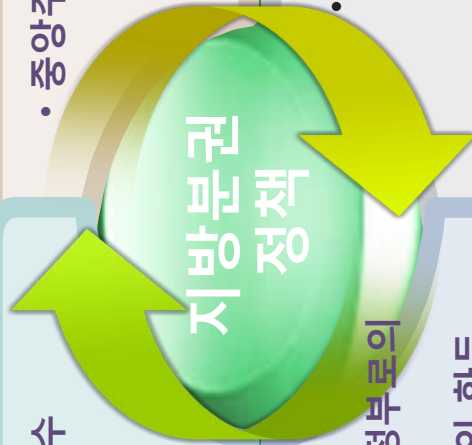


2

CONTENTS



2.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방향



- 지방분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 창의, 혁신의 시대

- 중앙주도적 국가발전은 이제 한계에 도달
지방주도의 국가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 스마트 사회는
관료제 정부에서 스마트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소통과 참여가 절대절명의 화두

-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더 이상 주종관계가 아닌
파트너십 관계로 파악

지방분권정책의 핵심과제들



3

CONTENTS

3. 지방분권정책의 핵심과제들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 조직, 인사, 재정적 측면
- 기능적 측면: 교육, 문화, 복지 등

● 권한이양의 속도 문제



3. 지방분권정책의 핵심과제들

• 어떠한 정책수단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 생산과 일자리가 결합한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역인재 양성 등)
- 다자간 참여 정책네트워크 구축(산-학-연 연계 체계 강화)
- 권역별 경제 구축: 자립성과 완결성 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발굴: 풍력산업, 청정헬스 산업, MICE 산업)
- 국가사무와 재정의 지방이양
- 자치경찰제 도입
-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기능 강화
- 기초지방선거 공천 폐지
- 분권적 연방형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상)

중앙정부의 설득하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체계 구축



4

CONTENTS



4.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체계 구축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적극 활용

중앙언론과 지역언론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한국행정학회를 비롯 유관학회와의 지속적 MOU체결

글로벌 시대에 대비, 외국 유수 지자체와 교류방안 확대

서울시, 세종시 등 주요 행정도시에 특별사무소 설치

제주도청내에 도지사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화

네트워크
조직체계

THANK YOU



새정부에서의 지식기반집적지 제주 전략

정 수 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식기반산업집적지 제주전략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교수

I

1. 새정부의 기조 - 대외환경의 변화

1. 새정부의 기조 - 내외환경의 변화

-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변화



- 대기업중심 → 중소기업중심
- 제조업중심 → 지식기반산업강조

-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올리는)



- 청년취업, 여성고용확대, 정년연장
- 그러나 관건은 신규고용창출

- 창조과학(지식기반산업) + 일자리창출



- 국가연구개발비증진
- IT기술+전산업연계
- 창조혁신형 생태계조성 6만개
- 스마트코리아 프로젝트 23만개
- 생활복지산업 등 내수일자리 28만개

네트워킹
클러스터



창조
중소기업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산업 투자확대

박근혜정부의 일자리창출관련공약

늘 지 오

늘리고

국민행복 **기술**로 일자리 창출

○ 창조형 **중소기업**

- 대학의 **창업**기지와, 실버창업보육센터, 엔젤투자와 벤처기업 활성화, **코텐즈** 펀드 규모 확대
- 학별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해외취업장려금, 해외 인력채용 DB
- 근무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진
- 청년창업 활성화
-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지키고

고용안정, 정리해고 요건 강화

-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올리고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Ⅱ

일자리 창출의 기본공식과 키워드

고용은 생산의 파생수요

IT
기술

생산
증가

기업
유치

·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생산활동증가를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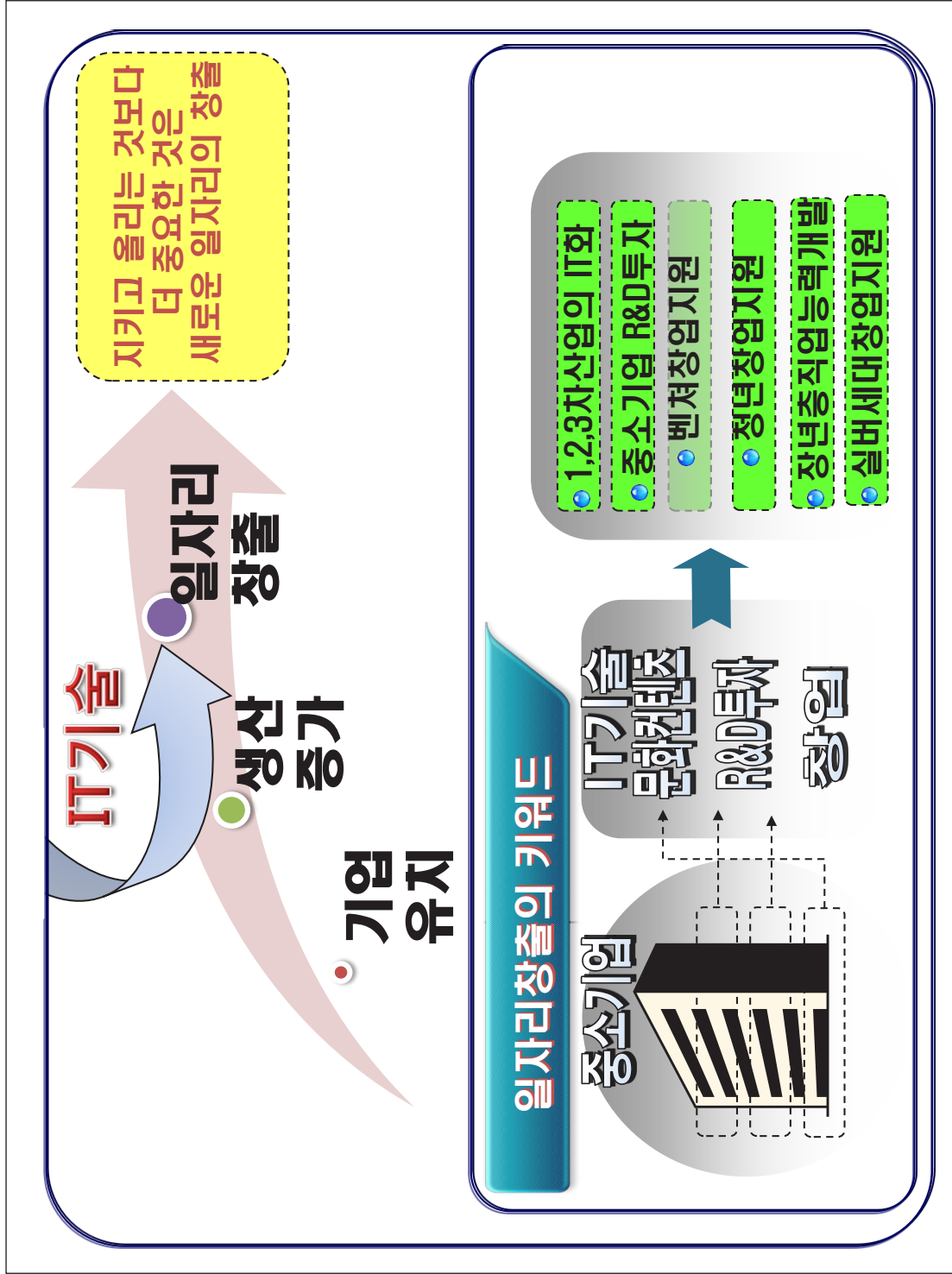
- 과거 실패한 일자리창출사업 사례 : 인턴제
- 고용주도, 취업자도 불만족

생산이 전제되지 않은 고용은 기업에게는 부담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은 노동자도 비선호

일자리
창출

· 박근혜정부의 일자리창출방안의 특징

- 창조경제개념 : IT기술과 산업의 접목
- 중소기업중심 : R&D투자의 적극지원
- 일자리 나누기 강조(지키고)
- 질 좋은 일자리 강조(올리고)



박근혜정부 일자리창출 공약과 제주경제

- 신규일자리 창출분야외에는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
 - 중앙정부차원에서 접근할 사안들(비정규직문제, 사회보험, 구조조정문제 등)
-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 기업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 1차산업 + IT기술 결합으로 국비확보
 - 도내 중소기업육성정책과 박근혜정부의 공약과의 조화 → 재구성



박근혜정부 일자리창출 공약과 제주경제의 기회

- 중소기업중시경향은 소규모업체가 대부분인 제주경제에 도움
- 동반성장의 화두로 지방소외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

박근혜정부 일자리창출 공약과 제주경제접목의 문제점

- 전국 지자체가 모두 유사한 정책들을 제안할 것임
 - 모든 지자체가 “벤처, IT융합산업화, 중소기업,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원을 요구할 것임
- 창업을 두려워하는 청년세대들
 - 창업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 즉 재생산이 가능해야함
- 중소기업취업을 원하지 않는 청년세대들
 - 중소기업은 구인난, 청년은 취업난이라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문제

제주공약은 타 지역공약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창출에 한계
→ 전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들의 연속성에 기인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USKR)의 차질없는 조성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조성(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전북
·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간) 건설 추진
· 지리산·덕유산권 헬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
·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전남
·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지원
· 남해안 철도고속화(남해~단양) 추진
·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추진
· 양양만권 미래형관광단지 조성
· 오수항공체 조성
· 광주~원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 제주 정원 통합 적극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 중부내륙선 철도의 보석·고속화 추진
· 제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Bio) 산림 휴양벨트 조성

제주공약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 관광허브 육성 민간복합관광미항 건설사업지원 확대
-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 강원도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추진
·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 설악산·대관령·금강·지리산·한라산 등 좋은 점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 춘천·강릉·제천·영월·홍천·속초·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 점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 경남
· 우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
·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新문화관광 길크로트 구축
·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 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 경남
·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추진
·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 부산
· 3대 문화권 관광문화사업
·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 철도화 추진
· 경북
· 진통과 점단의 조화를 통한
· 세종
· 세종로 유원지 개발

타지역의 기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제주지역의 공약이 대폭하고 있음

바른혜정부 일자리창출 공약과 제주경제접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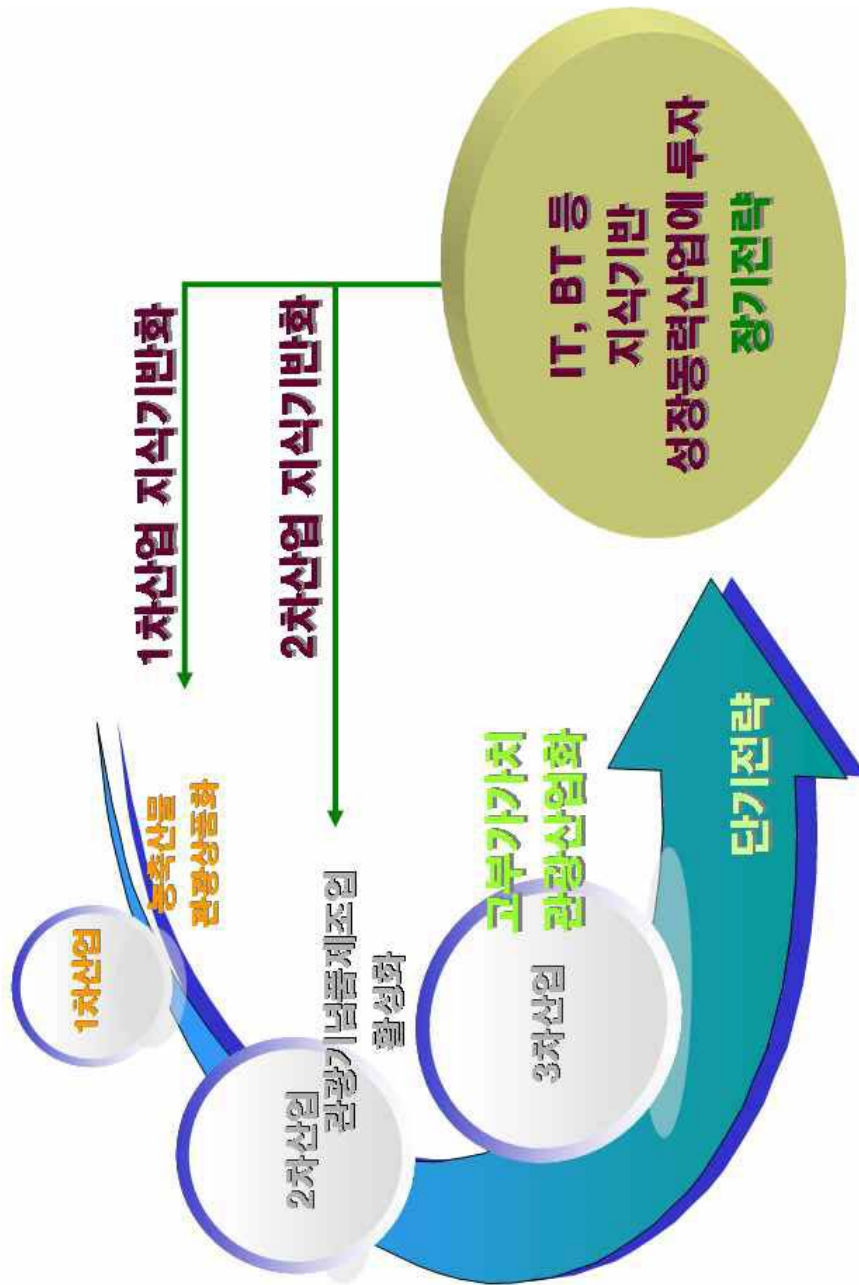
- 전국 지자체가 모두 유사한 정책들을 제안할 것임
- 제주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 창업을 두려워하는 청년세대들
- 유치된 대기업과 네트워킹하라**
- 중소기업취업을 원하지 않는 청년세대들
- 중소기업 지원시 비금전적인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라**

제주의 미래비전을 실현시킬 기회로 삼아야 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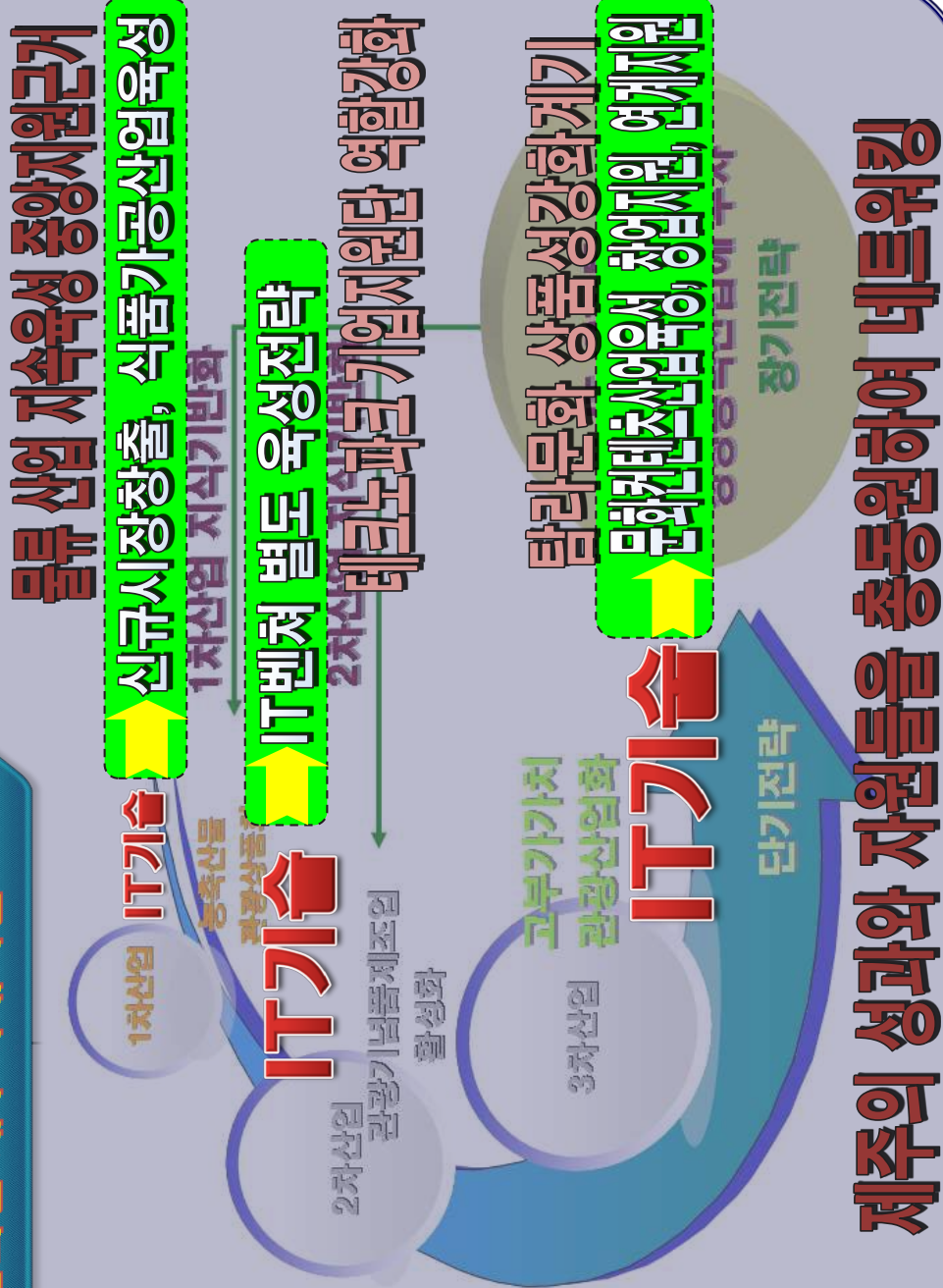
제주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제주의래비전



정수연(2009), 신정부 광역경제권 정책과 제주경제의 대응방안, p.15

진화된 제주 미래비전



창조경제의 새 패러다임 제시

IT기술

만을 접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님

지식기반산업



+

IT기술



일자리의 혁신적 증가?

창조경제의 새 패러다임 제시

타 지역이 모방할 수 없는 제주만의 창조경제패러다임 제시

지식기반산업



+ IT기술

일자리의
혁신적 증가!!



문화적
공간

청정자연
관광

네트워크
외부성

중소기업중심

창조도시론

II

-창조도시의 새 패러다임: 네트워크 외부성-

창조도시 이론



플로리다(2002)는 창조계급을 과학과 엔지니어링, 건축과 디자인, 교육, 미술,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라고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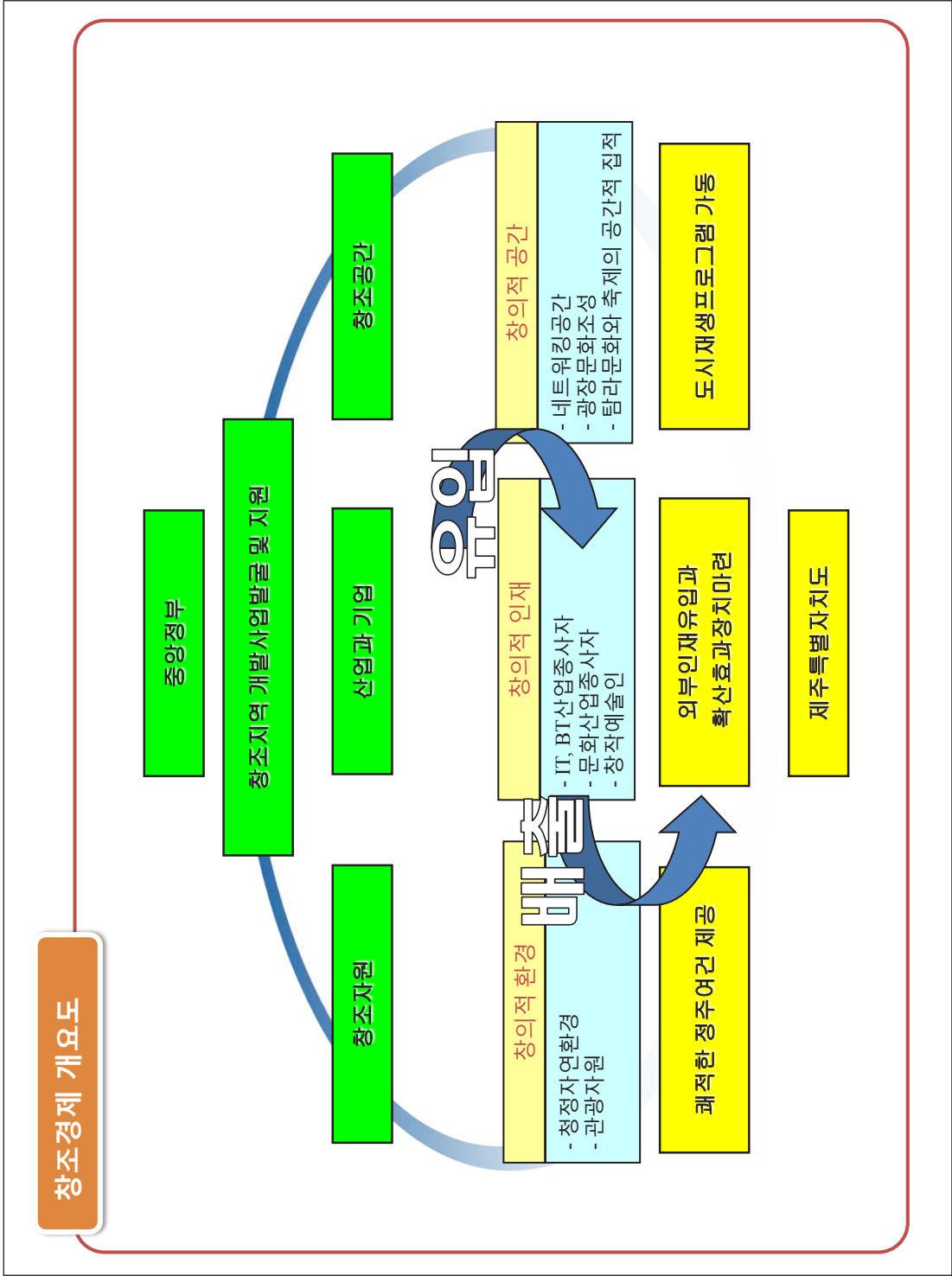
창조도시란 창조계급과 창조산업이 그 도시의 핵심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산업이 연관된 도시를 말함(강병수, 2009)



창조도시는 필연적으로 문화예술이 총만한 지식기반산업화를 견인 대규모기업보다는 소규모 SOHO형태의 기업출현을 가능하게함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도시는 문화, 산업, 주민과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정주시대를 도래하게 할 것임
창조도시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격을 살린 살고싶은 지역개발사업



창조지역 사업요건

내발성

- ❖ 국비지원없이
- ❖ 지자체 자체재원만으로 일정기간 수행한 사업
- ❖ 2010년 이전 계속사업포함
- ❖ 10년 지자체 본세출예산에 반영된 사업

창조성

- ❖ 타지역에서 시도되지 않은 독창적 사업주제와 소재활용
- ❖ 사업설계와 추진과정이 창조적인 사업

지역발전

- ❖ 문화적, 사회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이끌어낸 사업

참고) 성과지표

경제적가치 : 일자리창출, 창업기업수, GRDP, 지방세수입
 사회적가치 : 정주민구증가율, 소속감과 연대의식 향상정도
 문화적가치 : 관광객수, 외부인종 등

2. 제주의 대응기조

관광을 강조하되 창조경제, 중소기업강조



제주공약에는 제주의 지식기반산업내용이 없음

창조경제의 적지로서의 제주의 강점을 강조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성공사례강조, 청정자연환경 등 지표개발

테크노파크, 과기단지, 투자진흥지구 기업들관련 지원사업마련



일자리창출, 지역사회연계, 중소기업인력교육지원사업

이를 통해 지역의 당위성을 마련

제주는 왜 지식기반산업집적지, 창조경제의 모범사례가 될수 있는가?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input)

- 지식기반산업에게 있어 지리적 인접성보다는 시간적 근접성이 더 중요

↑
인접한 도시들간의 보완관계외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도시들간의 보완관계도 주목할 필요성

원재료보다는 지식노동자가 산출탄력성이 더 큰 생산요소

- 산업단지조성보다는 창의적 환경과 정주여건이 더 중요
- 세계적 지식기반산업집적지들은 청정자연, 관광,문화의 결합지역

↑
창의적 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확충에 주목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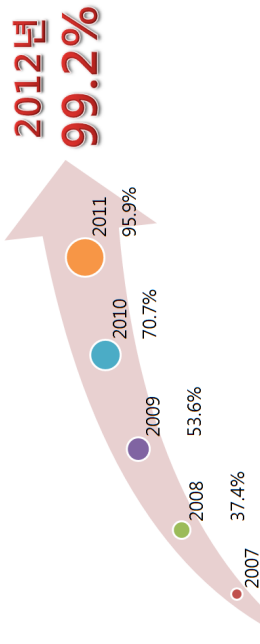
주요운송대상은 상품이 아닌 사람

- 지식기반산업에게는 항만보다는 공항이 더 중요
- 지식기반산업은 운송비용에 덜 민감하며 운송시간, 즉 비행시간이 더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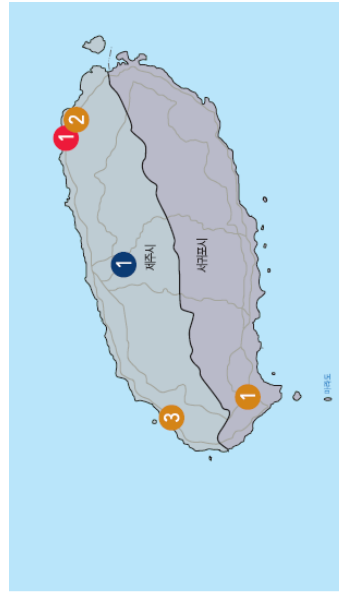
↑
사회간접자본중 가장 중요한 시설은 공항시설, 단 투자시에는 수요를 고려해야

출처 : 정수연, 초광역개발권 남해안선벨트 기본구상안 마련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2009, p. 41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성공에 주목하라



국가산업단지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일반산업단지

1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1 서귀포 대평농공단지

3 제주 금능농공단지

2 제주 구좌농공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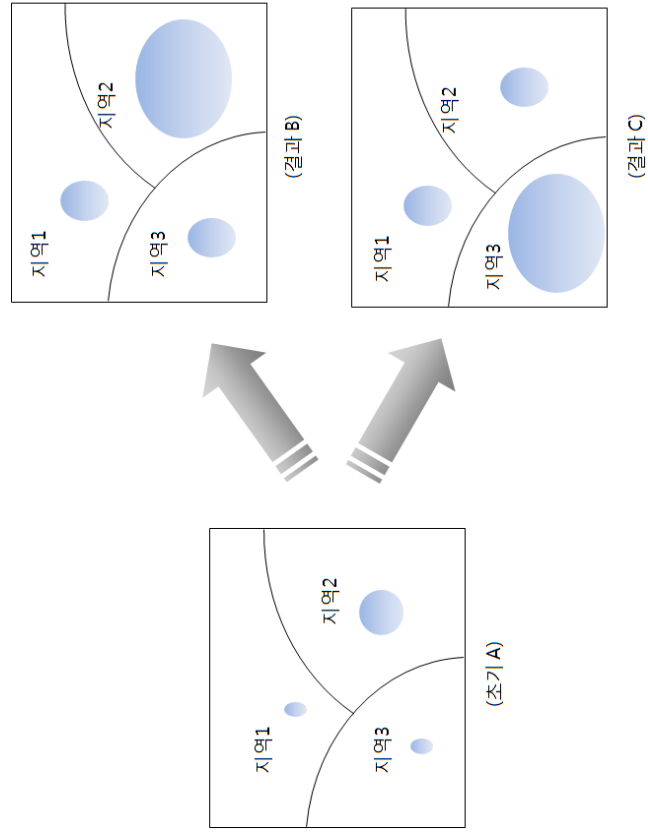
..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제주에
입지하고 있다

- 고품질노동력 비중
- 판매시장과의 거리
- 원자재시장과의 거리
- 물류비용

기존의 기업입지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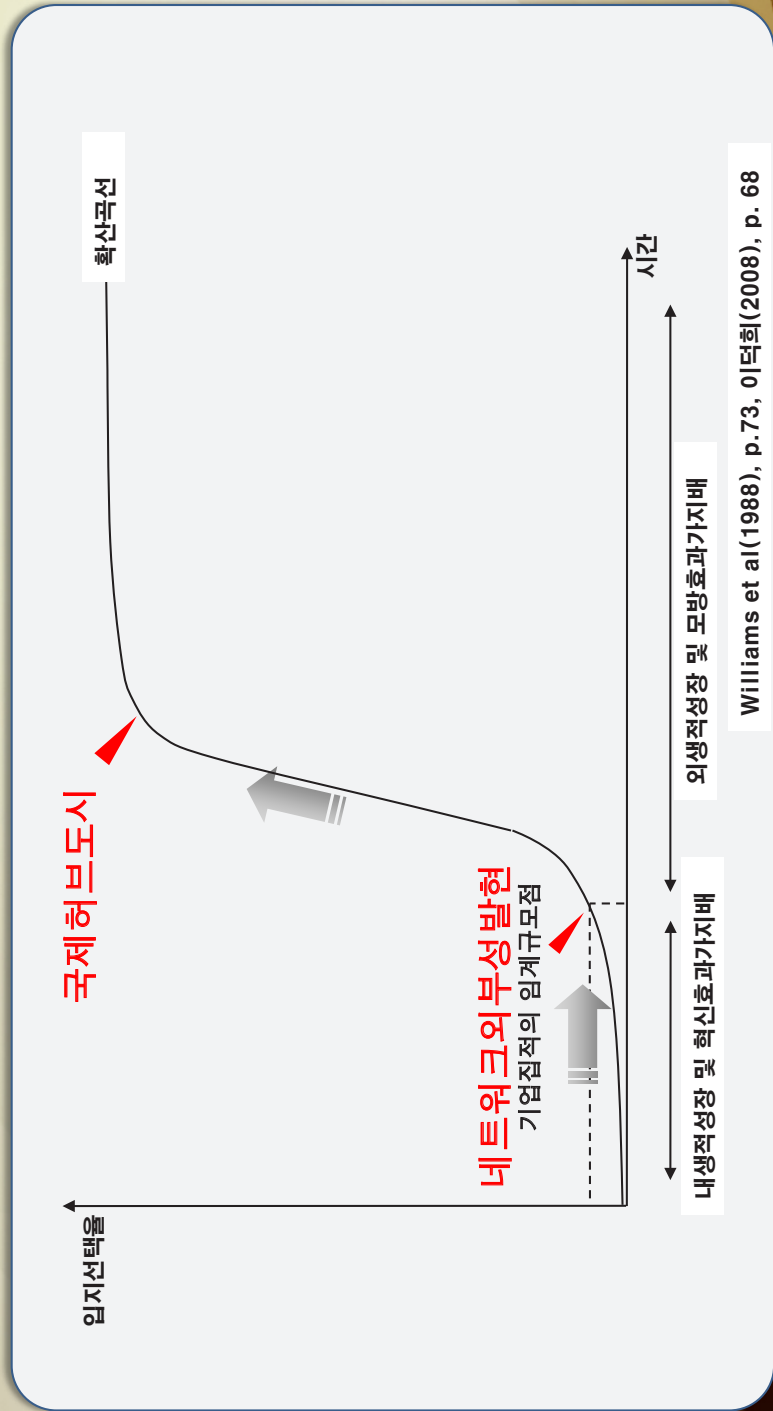
→ 네트워크경제이론으로는 설명가능

네트워크 외부성



출처 : Arthur, W. B(1968), "Urban Systems and Historical Path Dependence", J.H.pp.85-97와 이덕희, 네트워크
이코노미 : 부분과 전체의 복잡성에 관하여, 동아시아, 2008, p. 154-160을 참조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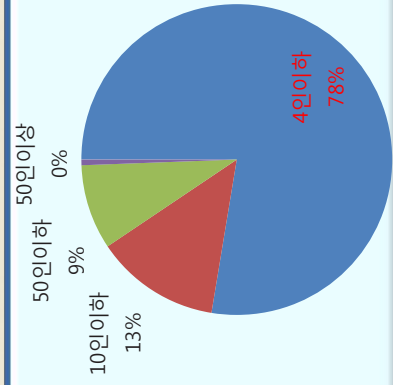
네트워크 외부성



새정부 기조와 제주경제의 대응



총사자수	기업수	비중
4인이하	1449	77.6%
10인이하	242	13.0%
50인이하	165	8.8%
50인이상	11	0.6%
계	1867	100.0%



산업단지와의 진화

창조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청정자환경

관광자원

문화자원

고급정주환경

최근의 산업단지



구 산업단지



문화와 결합된 신개념 산업단지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형

제주

전원형
첨단산업집적도시
(문화관광+연구+생산)

일본 초구바형

대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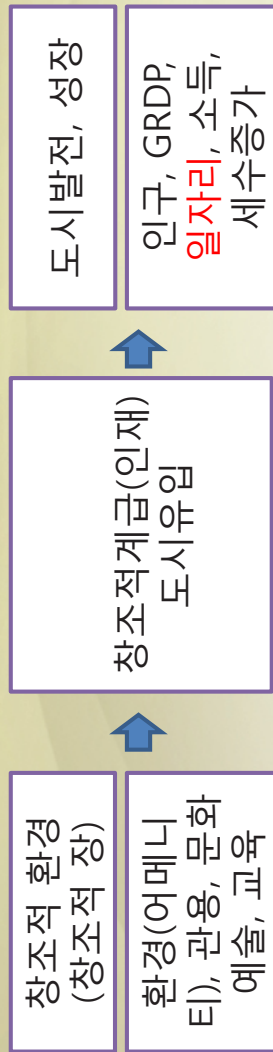
국가주도로
교육과 연구의 결합
(연구+생산)

미국 실리콘밸리형

서울
테헤란로

자연발생적
기업집적
(연구+생산)

출처 : 정수연(2013), 제주도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로의 이행전략, 제주발전연구 제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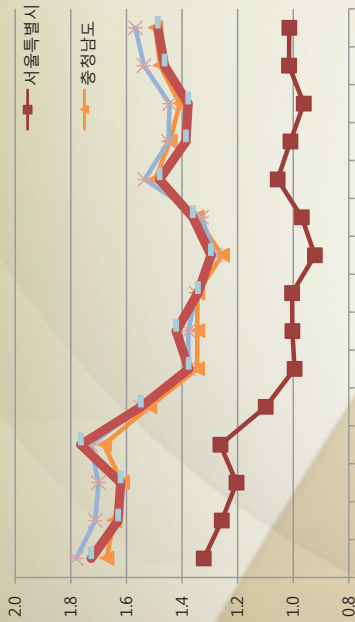


창조계급 → 지식기반산업 → 일자리창출

플로리다	직업분류	산업분류	
창조핵심	기술및과학	첨단산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컴퓨터 사무용기기제조업/전기기기계 변환장치 제조업 - 전자부품등 제조업 - 의료 및 정밀기기 제조/항공기제조 - 전기통신업/연구개발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영화 방송 공연산업 - 뉴스제공업
	예술가	문화사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광고 및 디자인업
	교육		
창조전문가	창조적전문가	생산자서비스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및 임대업 - 법무 및 회계업
	창조적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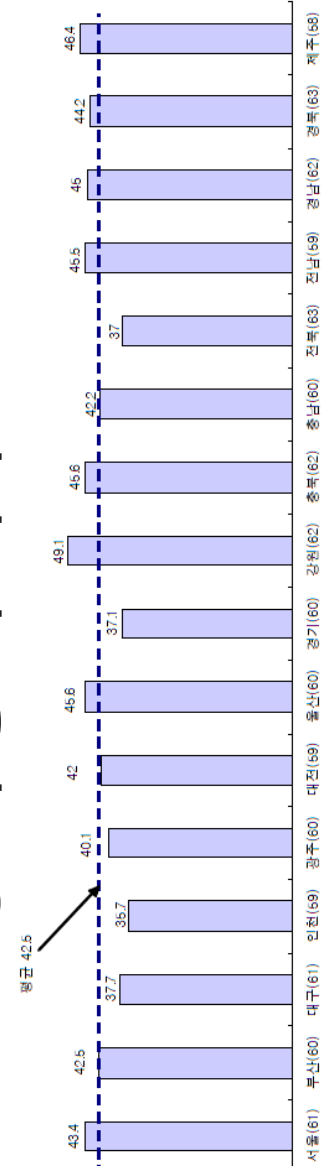
이준, 오동환(2011), 도시와 창조계급의 변화와 특성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p.342

창조지역으로서의 제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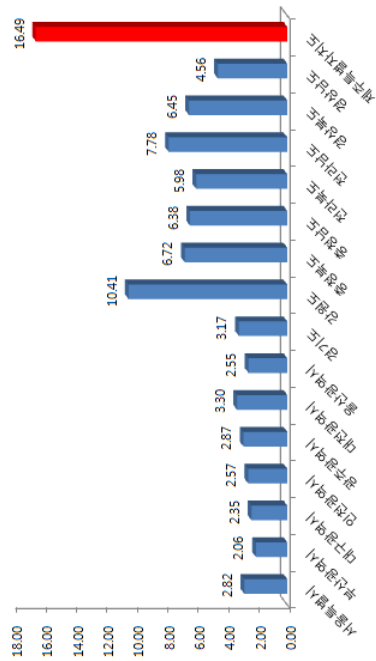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행복지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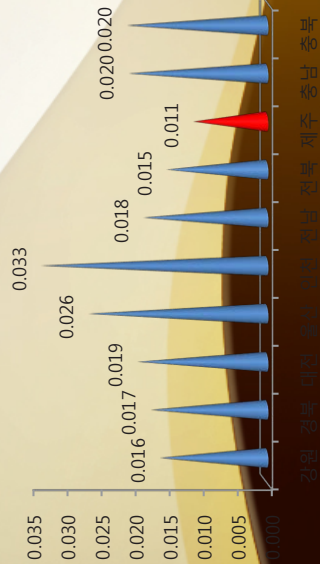


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1997	1.32	1.25	1.29	1.43	1.56	1.67	1.57	1.78	1.67	1.57	1.65	1.67	1.61	1.78	1.59	1.60
1998	1.28	1.25	1.28	1.32	1.46	1.59	1.47	1.65	1.58	1.54	1.57	1.64	1.59	1.71	1.58	1.63
1999	1.24	1.20	1.19	1.30	1.43	1.47	1.42	1.59	1.54	1.52	1.53	1.61	1.53	1.70	1.58	1.62
2000	1.26	1.22	1.23	1.36	1.48	1.48	1.48	1.62	1.61	1.58	1.57	1.68	1.57	1.72	1.56	1.74
2001	1.09	1.09	1.09	1.20	1.31	1.40	1.31	1.41	1.42	1.40	1.41	1.51	1.41	1.54	1.38	1.40
2002	0.99	0.96	0.97	1.17	1.25	1.19	1.23	1.29	1.30	1.28	1.34	1.26	1.37	1.22	1.26	1.37
2003	1.00	0.97	1.07	1.20	1.26	1.21	1.27	1.31	1.26	1.25	1.34	1.26	1.37	1.24	1.28	1.42
2004	1.04	0.94	1.08	1.14	1.19	1.17	1.24	1.26	1.25	1.26	1.34	1.22	1.34	1.19	1.25	1.43
2005	0.92	0.87	0.99	1.05	1.07	1.11	1.18	1.17	1.17	1.18	1.25	1.17	1.26	1.16	1.18	1.29
2006	0.96	0.90	1.00	1.08	1.14	1.15	1.24	1.28	1.19	1.22	1.34	1.20	1.33	1.20	1.24	1.36
2007	1.05	1.01	1.11	1.13	1.24	1.25	1.26	1.39	1.35	1.34	1.39	1.47	1.37	1.53	1.36	1.48
2008	1.01	0.98	1.07	1.18	1.18	1.18	1.21	1.38	1.28	1.25	1.31	1.44	1.30	1.44	1.31	1.38
2009	0.96	0.94	1.02	1.14	1.13	1.15	1.16	1.30	1.22	1.24	1.31	1.40	1.29	1.44	1.24	1.32
2010	1.01	1.04	1.08	1.21	1.23	1.20	1.36	1.30	1.31	1.40	1.47	1.37	1.34	1.57	1.37	1.43
2011	1.04	1.07	1.14	1.22	1.23	1.26	1.39	1.31	1.33	1.42	1.49	1.40	1.56	1.54	1.44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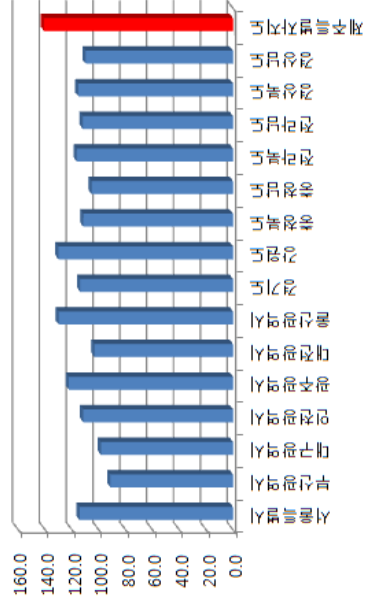
인구십만명당 문화시설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도



인구십만명당 체육시설



연번	지역	한국의 유네스코세계유산현황	유산유형	지정연도
1	경북	석굴암과 불국사		1995
2	서울	종묘		1995
3	경남	해인사 장경판전		1995
4	경기	수원 화성		1997
5	서울	창덕궁	문화유산	1997
6	경북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
7	전남, 인천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2000
8	서울, 경기, 강원	조선왕릉		2009
9	경북, 광주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
10	제주	화산점 및 용암동굴	자연유산	2007

3. 제주의 보완지표, 목표지표

지역	기대수령 (2011)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11)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 (2011)	폐수배출 업소 (2010)	대기오염 (2012)
서울특별시	82.67	2.82	114.32	4,068	0.034
부산광역시	80.22	2.06	91.33	2,210	0.024
대구광역시	80.65	2.35	98.43	2,286	0.020
인천광역시	80.73	2.57	111.59	2,870	0.033
광주광역시	80.77	2.87	122.31	1,106	0.018
대전광역시	81.28	3.30	103.19	1,056	0.019
울산광역시	80.20	2.55	129.90	922	0.026
경기도	81.71	3.17	113.85	13,731	0.031
강원도	80.73	10.41	130.11	1,961	0.016
충청북도	80.11	6.72	111.52	2,380	0.020
충청남도	81.08	6.38	105.36	2,914	0.020
전라북도	80.74	5.98	116.38	2,241	0.015
전라남도	80.16	7.78	111.89	2,235	0.018
경상북도	80.16	6.45	115.29	3,846	0.017
경상남도	80.33	4.56	109.74	3,891	0.018
제주특별자치도	82.18	16.49	140.76	549	0.011

보완필요지표

- 정주환경(주택보급율, 주택가격상승율)
- 안전(교통사고, 범죄, 화재)
- 복지(기초생활수급자율)
- 의료(의사수)
- 문화예술총사자비용

창조도시 참재력지표

- 문화예술예산비중
- 공기청정도
- 공원, 문화시설비율
- 상수도보급율
- 경제활동인구
- 낮은 실업률
- 복지시설, 교육시설

창조도시 제주 목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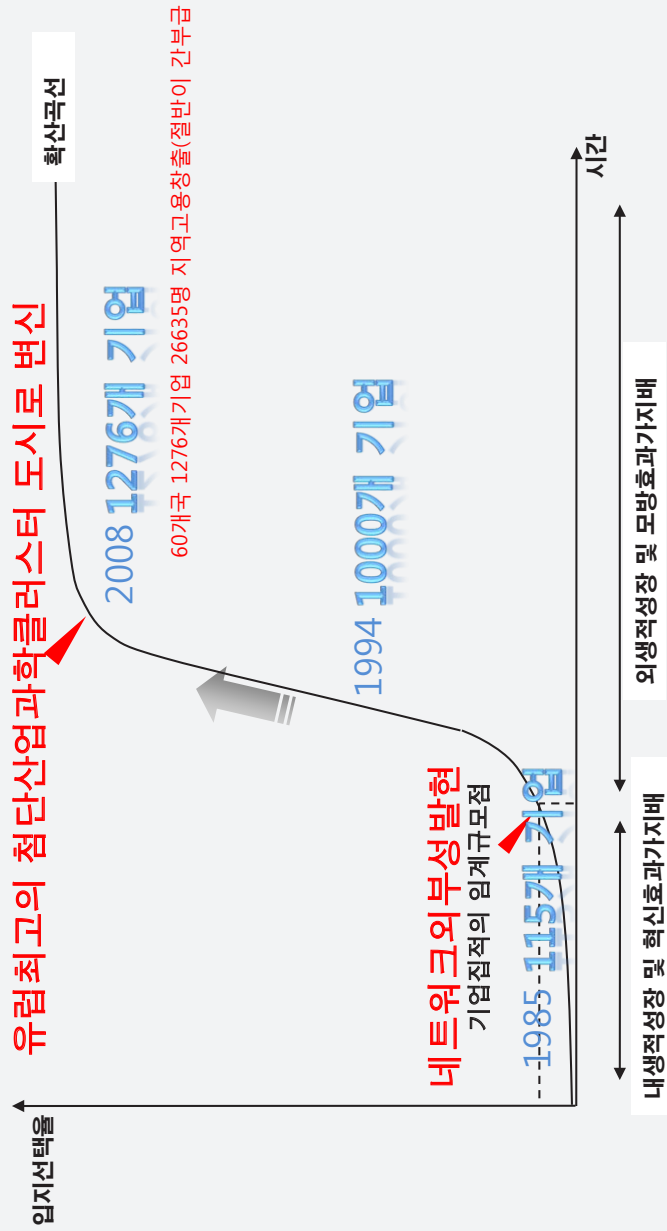
- GRDP
- 경제자립도
- 창업율
- 취업율
- 지식기반산업집적도
- 인구증가율
- 창조계급(첨단산업, 문화사업, 생산자서비스종사자수)

제주의 미래상

전국평균이하 ↑ 전국평균이상

창조인력 유입과, 창조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창출

4. 소피아앙티폴리스의 경험



소피아앙티폴리스의 경험

연도	경과	구분
1975-1977	툼엔하스, 국립과학연구소, 에어프랑스세계예약센터, 파리광산학교분교	내생적 성장 임계규모 도달
1982	125 개기업 도달	
...	발전가능성 외부인식	
1985	240 개기업 도달	외연적 성장
1986	390 개기업 도달	
1987	478 개기업 도달	
1989	572 개기업 도달	
...	세계경제위기발생	
1994	1,000 개기업 도달	
...	세계신기술관련기업들 진출	
...	고급전문직분야에서 1500명 고용창출	
1999	유럽최고수준의 과학클러스터 도시형성	정점
2005	도시의 외연적 확대	
2008	60개국 1276개기업 26635명 지역고용창출(젤반이 간부급)	안정적 고성장
...	5대를 리스터형성 : 정보공학, 생명공학, 화학및의약학, 환경공학, 물질공학및에너지	
현재	출처 : 김민주, 송희영, 시메노믹스, 2010, 한국물가정보, pp.290-302 재구성	

새정부 산업정책방향과 제주의 대응과제

송 우 경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 출범과 제주지역산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경우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목 차

1.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동향
2. 제주지역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3. 제주지역산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I.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동향

지역산업정책의 동향 (18대 대선 새누리당 정책 공약)

● 문제인식

- 수도권 규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경쟁력 집중 지속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역 특화발전을 촉진

● 지역산업정책의 기초

-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산업정책을 Two Track으로 전환
- 중앙정부 : 장기적, 광역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주력
- 지방정부 : 지역산업[산], 지역인재[학], 지역과학기술[연]의 3가지 핵심 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발전정책 추진

=> 지역산업정책의 대상[what] 불분명, 방법[how]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I.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동향

지역산업정책의 동향 (18대 대선 새누리당 정책 공약)

8대 핵심정책

- 동서통합지대 조성, 스마트한 지방도시재생사업, 지역중추도시권 육성(10+@)
 - 평화지대 프로젝트, 신공항 건설(국해부 2013년 수요조사착수), 사통팔달 전국교통망
 - 낙후지역 휴양 관광벨트 구축, 지역정책 추진체계개편
- ⇒ **물적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내용 미흡**

제주지역 주요공약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 4.3문제 적극 해결 지원
 - 감귤산업의 명품산업 육성 : 고품질 감귤 생산여건 및 신품종 개발 지원
 -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 우수 종마 육성, 승마장 시설개선, 전문인력 양성
- ⇒ **현재 특화자원 중심의 제한적 접근, 지역산업의 미래지향적/종합적 접근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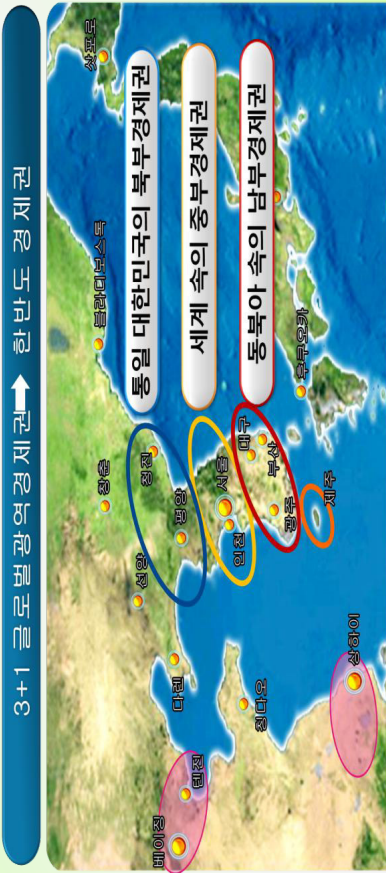
I.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동향

지역산업정책의 동향 [지역발전위원회, 2012]

● 광역경제권의 구도 수정

- 현재 : 5+2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 향후 : 3+1 북부경제권(북한), 중부경제권(수도권+강원권+충청권), 남부경제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제주권(세계적 관광휴양지)

=> 3+1 구도에서 제주도의 발전방향과 지역산업정책은 ?



통일 대한민국 :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

I.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동향

지역산업정책의 동향 (지역발전위원회, 2012.)

- 문제인식 : 오늘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
 - 신산업 육성은 주로 내일의 일자리로 지역주민의 체감도 낮음
 - 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개편
 -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
 - 지역주력(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 현장 R&D, 기능인력 공급
 -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초점 : 지방중소기업청 + 지방고용노동청 + 지자체 + TP 협력
 - 지역주력(특화)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촉진, 전문대/마이스터고 육성
 - 신산업 육성은 중앙정부 주도로 국가산업정책으로 추진
- =>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고려한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

II. 제주 지역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주 지역산업의 현황 (1)

- **지연/향토산업 : 지경부(RIS), 농림부 지원사업**
 - 지연산업(지경부) : 조릿대 신사업 창출사업, 아열대 약초 파워브랜드 사업
해조산업 특화 육성사업, 양채류 웰빙식품 육성사업
고부가 승마산업 육성사업, 수산물가공식품 글로벌 명품사업 등
 - 향토산업(농림부) : 제주시(향 당근, 우도 땅콩), 서귀포시(감귤 주, 3Eco)
 - **전략산업 : 참여정부, 지역전략산업 정책**
 - 관광산업, 건강 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 디지털컨텐츠
 - **선도산업 : 이명박정부, 광역경제권 정책**
 - 1단계(2009-11) : 물 산업, MICE 산업
 - 2단계(2012-14) : 동력서비스, 차세대식품융합(정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 ⇒ 지연/전략/선도산업 3층 구조를 신흥화산업(?) / 광역선도산업의 2층 구조로 개편 중

II. 제주 지역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주 지역산업의 현황 [2]

연구개발비 및 인력 [자료 : 강기준, 2012, 제주권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동향]

구 분	제 주 도				연평균증가율
	2007	2008	2009		
총연구개발비 (십억원)	75.2	80.3	109.5		20.7
국가R&D사업예산 (십억원)	54.3	59.2	58.0		3.4
연구인력 (명)	892	919	1,731		39.3
특허출원 (건)	69	64	69		0.0
SCI급 논문 (편)	76	126	104		17.0

제주도 소재 연구기관

- 기업지원기관 : 국공립연구기관(3개), 지자체 연구기관(6개), 대학연구소(16개)

II. 제주 지역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주 지역산업의 문제점 (1)

산업구조 및 실업률

	2001	2005	2009
1차 산업(%)	16.5	18.7	19.0
2차 산업(%)	3.2	3.4	4.1
3차 산업(%)	80.3	77.9	76.9
취업자 수 (천명)	264	284	289
실업률 (%)	2.6(전국 4.0)	2.5(전국 3.7)	1.6(전국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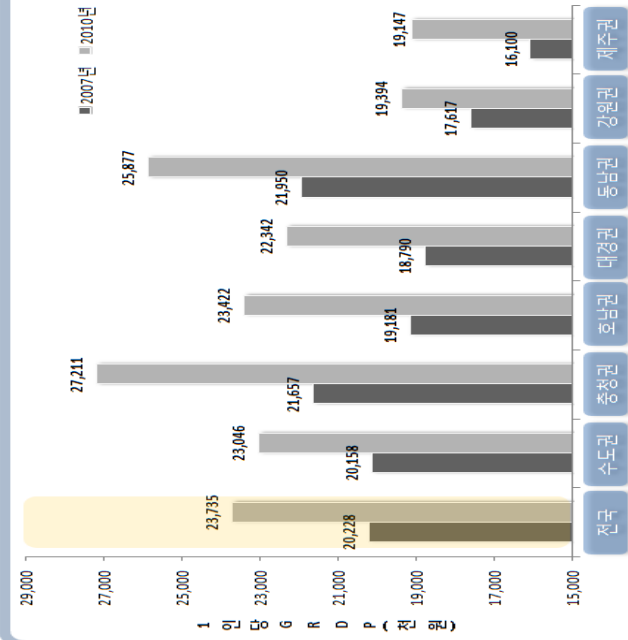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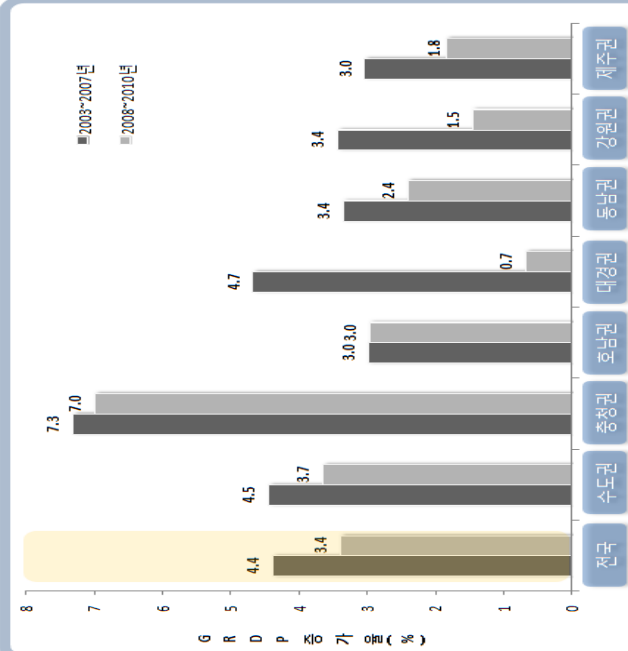
취업자 수 추이 [자료 : 강기준, 2012, 제주권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동향]



II. 제주 지역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주 지역산업의 문제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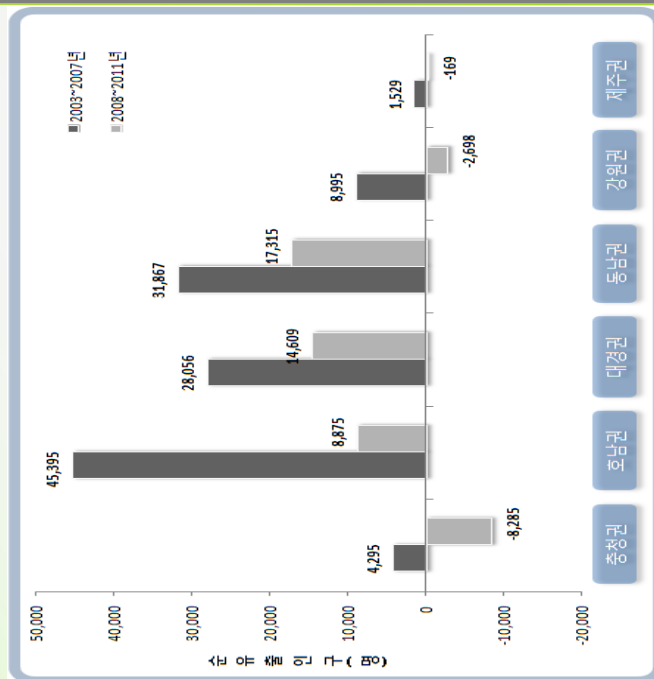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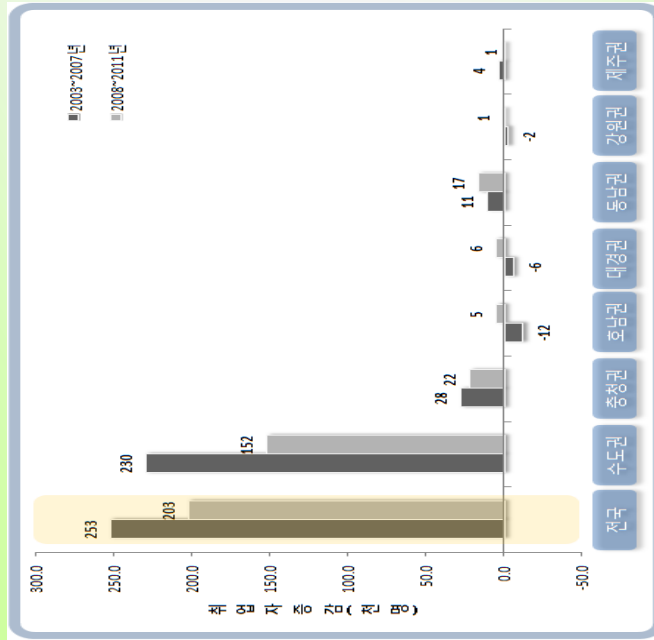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1인당 규모 (자료 : 산업연구원, 2012, 지역발전정책 백서)



II. 제주 지역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주 지역산업의 문제점 (3)

● 일자리 증감,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자료 : 산업연구원, 2012, 지역발전정책 백서]



III. 제주지역산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주지역산업의 정책방향 (정책동향 고려)

- 정책방향 : 특성화, 고부가가치화, 중소기업형, 내발성, 협력/연계, 주민체감도
 - 제주 지역특화 요소에 기반한 신산업 아이템 발굴
 - 제주 기존 지역산업의 성과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
 - 강소 중소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제주 지역 주도의 내발적/상향적 지역산업추진
 - 지역산업 + 지역인력 + 지역과학기술의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
 - 대외 개방형 연계협력의 네트워크 강화
- ⇒ 일자리, 소득 등 지역주민 체감형 지역산업의 성과 창출

III. 제주지역산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주지역산업의 검토과제 (1)

○ 제주 지역산업 융합센터 설립

- 기 추진한, 추진 중인 제주 기존산업(제품, 서비스)의 성장한계 돌파 및 고부가가치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이종 기술, 제품, 서비스, 산업간 융합화를 촉진
- 제주 도내 융합관련 기획/업무를 총괄할 제주지역산업융합센터 설치를 검토
- 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11.10)에 근거한 생기원 산업융합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Daniel Pink (미래학자) : 21세기는 융합과 컨셉의 시대이다.

○ 제주형 중소기업 육성 파트너십 구축

-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 혁신형 벤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제품화, 전문 인력, 글로벌 마케팅 등 기업 needs 중심의 전략적 맞춤형 지원
- 도청(지방중기청+고용지청)+제주TP+제주연+대학 등 중소기업 육성 파트너십 구축
- 벤처 / 중소기업 -> 글로벌 중견기업 도약의 filtering up 환경조성 (관련 조례제정 검토)

* 영국 : 2012년 광역단위 RDA 방식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파트너십 체계(LEP)로 전환

III. 제주지역산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주지역산업의 검토과제 (2)

- Mega Trend 대응형 제주 신산업 육성
 - 메가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로 지역산업에 위기적 요소와 기회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선제적/전략적 대응이 중요
 - 예) 제주형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 식품, 의류/용품, 서비스 유망) <- 고령화
 - * 시장규모 : 2010년 33조 2,241억원, 2020년 124조 9,825억원 (연평균 14.2% 성장)
 - * 지자체 동향 : 서울 (고령사회 조례제정, 2010), 부산 (항노화산업 육성 조례제정, 2012)
 - 예) 해양 레저장비산업(동력 장비, 무동력 장비 등) <- 아열대화, 해양레포츠 수요 증가
 - 예) 해일, 해풍 등 방재산업(방재 모니터링, 제풍 인증/실증) <- 아열대화, 기상이변
- 지역주민 체감형 지역산업 육성
 - 특화요소에 기반한 차별적 비교우위 지역산업 아이템(예: 천연염색, 현무암 등) 발굴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주민 참여/수혜형 지역산업육성 체계 강화
 - 창출된 부가가치의 도내 환류, 일자리/소득 등 지역주민 체감도 제고
 - * 제주지역의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 자립적 지역발전 촉진

III. 제주지역산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주지역산업의 검토과제 (3)

● 정부조직 개편 & 제주 지역산업

- 새정부 출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기술부(ICT) 신설 가능
- 과학기술, 해양수산, 정보통신 분야에서 제주 지역산업의 연계발전 분야 모색 필요
- 지역산업 유망 분야 : IT/과학기술과 기존 지역산업 융합,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 등
- * 창조경제론 :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신성장동력, 새로운 시장,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

● 기업수요 대응형 창조적 산업공간 확보

- 제주 지역은 국가산단 1개, 농공단지 3개가 운영 중. 일반산단 1개는 미개발 상태
- 산업용지 수요 > 산업용지 공급,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
- 광역권 선도산업, 신특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 용지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토지비축제도, 지식기반형 산업공간 확보 검토
- 기 지정 산업단지에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기업집적 및 클러스터 촉진

III. 제주지역산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주지역산업의 검토과제 (4)

○ 국내외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 활성화

- 3+1 광역권 구도에서 제주 지역산업의 비교우위 유지, 발전역량 확대를 위해 국내외 초광역권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 및 주도적 추진 (open innovation 촉진)
- 제주 지역산업의 주요 사안별 국내 광역권과 연계협력 추진 (정부 공모사업 활용)
- 글로벌 연계협력을 통한 제주 지역산업의 경제적 배후지 확대 (한중 TFA 대비)
 - * 초광역연계협력 사례(동력) : 부품소재(경남) + 모듈(호남) + 인증 및 유지 서비스(제주)

● 제주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 2013년은 전략산업 3단계(2009-2012) 종료, 신 특화산업(2013-2015년) 시작, 광역선도 2단계 진행(2012-2014), 향토산업 등 단계적 지원사업이 중증적 진행
- 제주지역산업의 안정적, 체계적, 내발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10년) 수립
- 중장기 관점에서 향토산업(감귤, 말, 수산자원 등), 신특화산업(?, 선도산업 [풍력서비스, 헬스 푸드, 뷰티 향장, MICE]의 연계체계 및 사후지속화, 신특화요소 사업 도출
- *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기반으로 국비보조사업(예타사업 등), 민자유치사업, 도자체사업 등 발굴

III. 제주지역산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참고〉 Mega Trend & 제주도 (국토연구원, 국토 대예측)

● 메가 트렌드

- 정치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 저출산 및 초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과학기술 발달 및 융복합화

● 메가 트렌드 -> 제주도 영향

- 정치 다극화 : 중국관광객 증가, 이어도 중요성 증대
- 경제 글로벌화 : 해외 관광객 증가, 중국인 투자 증가
-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 아열대화, 해양자원 및 에너지 이용 증가
- 저출산 및 초고령화 : 농촌 공가 증가
-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 세컨드 홈 증가, 체류 및 휴양관광 증가
- 과학기술 발달 및 융복합화 : 접근성 제고, 해양산업 발달

III. 제주지역산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참고〉 Mega Trend & 제주도 (국토연구원, 국토 내예측)

● 제주권 미래모습 (지역산업 관련 사항)

- 동북아 MICE 사업 발전 : 동북아 컨벤션 심 부상, 인센티브 관광 증가, 특수목적 관광활성화
- 관광기능 확충 : 국제공항 및 항만시설 등
- 아열대화로 관광 활성화 : 해양레포츠 가능일수 증가
- 아열대화로 농업 및 양식 변화 : 제주커피, 열대과일, 참치 등
- 복합형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 제주 동북부 동력발전설비의 인증, 실증, 유지보수 거점화
- 이어도 해양 생물, 자원 및 에너지 연구개발 거점화



주요 참고자료

- 새누리당 제18대 대선 정책 공약집, 2012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정책 : 어떻게 해야 하나 ?, 2012
- 지식경제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 세미나 : 융합, 신성장동력, 2012
-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2
- 국토연구원, 국토 대예측, 2012
- 문의 : 송우경, swkyong@kiet.re.kr / 3299-3071
[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위원, [전]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새정부의 사회복지 · 여성분야 정책과 과제

김 성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과제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목차 -

I. 들어가며

II. 새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2. 세대별 복지
3. 편안한 삶

III. 새정부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향후 과제

1. 주요 사회복지정책
2. 향후 과제
3. 지역과의 연계과제

I. 들어가며

■ 새정부의 정책

- ‘국민행복 10대 공약’ :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 ‘세상을 바꾸는 약속’ : 20대분야 201개 과제 제시

■ 새정부의 복지정책

- ‘맞춤형복지’를 통한 선별적 취약계층 지원임.
 - 세대공약 : ‘편안한 삶’
 - 계층공약 : ‘행복한 여성’, ‘장애인’
- 더불어 보편적 복지의 성격도 가짐
 -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 공약의 구체화와 더불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실업, 빈곤의 문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본 고에서는 새정부에서 제시한 복지정책들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함과 더불어 추진과제 중 지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업 등을 제안하고자 함.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1. 가계부담 덜기
2.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3. 교육비 걱정 덜기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 일자리 늘/지/오

5.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6.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7.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8.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4대 사회악 뿌리뽑기)
9.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10.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II. 새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한국형 복지체계 = 선택적 · 맞춤형 복지

: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작동하는 맞춤형복지시스템 및 전달체계 구축

○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1) 아동 :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 학교’로 운영

-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 학교’ 도입 추진
-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 성범죄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부인 방지
- 아동청소년 대상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2) 청소년 :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 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
 -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Wee스쿨에 학교폭력 전문상담·치료인력 대폭 확충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 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3) 청년 :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합니다.

○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경감
 - 소득 1-2분위 : "전액 무상" (100%지원)
 - 소득 3-4분위 : "3/4" (75%지원)
 - 소득 5-6분위 : "반값" (50%지원)
 - 소득 7-8분위 : "1/4" (25% 지원)
 - 소득 9-10분위 : 돈독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 ⇒ 2014년 대학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 '지방대학 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4) 중장년 :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입시에 학교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출제금지,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중·고등학교 프로그램 무상화
-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등

○ 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최하위 계층부터 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50만원 단위)

5) 어르신: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이 더욱 커집니다.

○ 기초연금 도입

- 기본방향 : 현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 대상 및 내용 :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종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

○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 단순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및 보급
- 참여수당을 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참여가능 개월 수도 현 7개월에서 12월로 확대 추진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 독거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
-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

○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
-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 2014년 이후 소요예산 반영 추진

○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2. 세대별 복지

1) 여성 :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인이 됩니다.

■ 여성행복 3대 플랜

첫째,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둘째,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셋째,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상



○ 6대 실천 과제

-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시작
-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체계 구축
- 임신과 출산 부담의 사회 공동부담
- 다자녀 가구 지원 대폭 확대
-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 확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 미달 범위 확대(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고용비율 평균 60% → 70%)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교육기관 등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 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 제공
 -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종합 육아서비스체계 구축



임신기간 근로 시간 단축	- 임신초기 12주, 임신말기 36주 이후 일일 2시 간씩 근로시간 단축 (유급)
‘아빠의 달’ 도입	- 출산 후 1개월 간 남성출산후 가 장려(100% 유급)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 자녀장려세제: 저소득층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제 - 셋째 아이부터 대 학 등록금 전액 지 원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5%~ 10%)
맞춤형 보육서비스	- 수요자 맞춤형 보 육서비스 제공 (기본형, 기본+가사 서비스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확대(0세-> 만2세, 맞벌이·다자 녀·장애부모 대상) - 시간제보육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 터 확충
0-5세 보육 및 교육 국 가완전책임	- 0-2세 영아보육료 국가 전액지원 및 양 육수당 증액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 어린이집확충(매년) · 국공립어린이집 50개소 · 기존 운영시설 100 개소 국공립 전환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임신과 출산 국가 분담 확대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 고위험 임신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및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
- 무로법률지원 확대 : 지원건수 매년 10% 증가
- 진술전문가 양성 : 2012년 10명 → 2017년 27명 배치
-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 개선 및 의료방문서비스 확대
- 통합지원센터 확대, 성폭력상담소 신규 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 실시
-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행 4% → 5%), 거주이전 지원 강화

2) 이웃사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인상 : 현재 5만원 → 15만원
- 한부모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확대
- 양육비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제공
-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무료상담을 확대하여 건강한 가정 확립
- 아이돌보미, 방과후프로그램 등 서비스 무료지원,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 확대

○ 다문화 가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 입국 후 초기 1년 동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종합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입국 5년 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기준 등을 검토,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 축소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지정책 별로 통합 조정

○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 상대 빈곤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의료, 교육, 주거급여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 문화,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조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 재설계 운영

○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선행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3) 장애인: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이 펼쳐집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
 - 장애인 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
 - 중증장애인 부모의 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지원·확대
- 「발달장애인법」 제정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발달장애인이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제정

-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
 -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약20만원)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 부가급여 현실화
-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 공공부문 의무고용비율 3% 달성 유도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장애인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3. 편안한 삶

○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 복지사각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 의료비
: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 노후지원
: 노후 걱정 제로!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 복지사각: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기준 등을 검토하여,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 증가보다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축소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지정책별 통합 조정방안 마련

○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 예방 기능 강화
-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빈곤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의료·교육·주거급여는 관련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강화와 급여체계 수립 및 이를 통한 복지일자리 처우의 현실화
 - 사회복지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한 보건 복지부의 직무교육 및 관리 기능 강화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50만원 단위)
 - 제도 도입 시 시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건강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2) 의료비: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

○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여 독거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하고,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

-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
-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노인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3) 노후지원 : 노후 걱정 제로!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기초연금 도입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약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 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

- 2014~2017년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보급
 - 아동안전·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 초등학교 등 학교 지원, 다문화 여성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등학교 환경 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
- 참여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참여가능 개월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추진

Ⅲ. 새정부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향후 과제

1. 주요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정책은 독립적 영역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사회복지, 여성 등 관련 영역에 산재되어 제시됨.
 - 핵심공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국가책임 보호’임.

분야		주요 내용
사회 서비스	연금	- 기초연금 도입(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건강 (의료)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 신체장애 치상위계증, 치매환자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빈곤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차상위계층 확대 -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 -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확대 개편 - 근로장려세제 확대
	아동	- 온종일 돌봄 학교(교실) 운영
	청소년	- 학생안전지역(safe Zone) - 고등학교 무상교육
어르신	청년	- 반값등록금(소득연계 맞춤형) - 지역대학 채용 할당제
	어르신	- 기초연금 도입 - 일자리 확대 - 간병비용 지원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여성·보육	- 종합육아서비스체계 구축(국가안전책임: 0-5세 무상보육) -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 맞춤형서비스 지원 - 어린이집 확대
	장애인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2. 향후 과제

-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재정 확충이 가장 핵심 과제임.
 - 향후 5년 동안 복지관련 135조원, 여성(보육)관련 23조원의 추가재원(연 27조원)이 필요함(기초노령연금 2배, 무상보육).
 - 따라서 복지공약의 우선순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민간중심의 과다한 경쟁체계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육서비스 공급체계의 비용효과성 개선 위한 검토가 필요함.
 - * 2013년 복지예산 100조원 넘어서에 따라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완화 등 공약한 복지정책이 반영됨. 복지공약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의료복지부문 예산은 감소함.
- 향후 정책 우선순위 마련과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지속적인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의 현안들이 고려된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1)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하여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현 노령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빈곤의 완화 효과는 있으나 재원조달의 문제 발생
 - * 재원: (현재)국고와 지자체 → (통합운영) 국민연금 재정
-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과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 역할분담
- 통합운영시 국민연금의 급여축소 반발 우려 있음.
-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

2) 의료

<건강보험>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의료보장 내실화

-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09)로 본인부담 상한액 하향 조정됨. 그러나 비급여 본인부담률(검사등) 증가함.
- 비급여 진료비 관리,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 등 필요

- 계층간/지역간 건강수준 및 건강관리, 의료 접근성 강화
 - 취약계층/취약지역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건강위협요인 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
 - 공공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부과체계 개선 등
- 진료비지불제도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적용 확대
 - 신체장애가 있는 치매환자,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우선순위로 장기요양보험에 적용(4, 5등급 신설)

3) 기초보장

- 기초보장 사각지대 완화
 - : 부양의무자(혈연 1촌, 배우자) 기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생
 -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 117만명으로 추산됨(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중하위계층이 부양의무를 지면 빈곤층으로 추락, 소득역전현상 발생
 - 부양의무자 범위 완화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의 단계적 완화
 -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 통합급여체계를 욕구별 급여체계로 개편
 - 각 급여별 선정기준 차별화->급여대상과 수급에 대한 구체화 필요
- 근로빈곤층 대상 자활지원정책
 - 고용-복지연계정책, 일자리 창출, 근로장려세제 확대
- 비수급빈곤층 보호방안(차상위계층 지원)

4) 여성(보육)

○ 영유아 보육기반 강화 및 보육시설기반 확립

*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매매 성행, 중일반 기준 보육료 지원에 따른

반나절반 어린이 선호, 보육의 공공성 약화 문제 발생

- 유아누리과정 지원 내실화

- 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확충

- 보육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강화

·국공립·국공형 보육시설 확충

-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편법 보육료 인상 규제, 표준보육료 산출 및 범위 마련 등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의 현실화)

- 지역사회 기반 육아지원센터 확충

- 일-가정 양립지원
 - 취업여성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맞춤형 일자리, 사업주 장려금 지급)
- 아동권리 기반 아동복지 구축
 - 예방적 차원의 욕구에 따른 경제적 지원, 고충상담, 보호, 활동지원, 지역사회 참여 등 지지적 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정의 아동, 버려지는 아동이 양육받을 권리 보장
- 아동·청소년 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의 공공성 및 보편성 강화
- 아동·청소년복지의 관련 부처 및 법령의 중첩 해결 위한 전달체계 개편

5) 노인

○ 노인의 건강

- : 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성질환 및 치매유병률이 증가함.
- 노인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 필요
- 노인환자 전문의 양성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 확충

○ 노인 일자리

- : 현재 대부분 사회공헌형 일자리(연중 7개월, 월 20만원)
- 노인의 접근성이 고려되고 욕구가 반영된 일자리 개발
 - 특히, 민간분야 시장참여형 일자리
- 노인일자리 질 관리

○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 평생교육, 이동권 확보,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여가환경 조성

○ 취약노인 대안 지원서비스 확대

- 독거노인, 학대노인 등

6) 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장애인 건강서비스 확대
-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7) 일자리

-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 및 줄은 일자리
- 복지일자리 확충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확충 및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질관리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증원 및 증원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국가재정 부담방안) 마련

8) 기타

- 전국 광역·기초지자체(244개) 예산 중 복지비용 비율이 50%를 넘는 곳이 2012년 28곳으로 증가
 - 복지예산: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영유아보육비, 기초노령연금, 희망근로사업 등 170여개 항목
-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3. 지역과의 연계 과제

-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방문·산모신생아 방문·지역사회서비스투자자 등 6개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이 6천8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 증가
 - 특히, 가사간병방문·산모신생아방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묶여 예산이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교부됨.
 -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지역사회맞춤형 일자리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사업확대에 따른 신규 일자리
 - 학교폭력전문 상담·치료인력, 배움터 안전지킴이, 보육교사 대체교사, 운동지도사, 심리치료사, 법률조력인
- 국가재난관리 사업

제주지역 핵심 공약 반영을 위한 전략과 과제

강 철 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시역 대응전략 수립 세미나

제주시역 핵심 공약 반영 전략

2013. 1. 18

강철준

제주도기자협회·제주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2012. 8. 21)
 “제주의 희망사항; 대선공약화를 위한 제주핵심과제 모색”
 ‘제주미래발전을 위한 10대 정책아젠다’(강창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목적에 맞는 재정지원 확대와 글로벌수준의
 규제완화

1. 신공항
2.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후변화 시범도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조세자율권 이양, 재정지원 확대
4. FTA 대비 1산업경쟁력 지원
5. 제주스마트 그리드 융합형 거점도시 조성
6. LNG도전역 보급 및 LNG발전소 건설
7. 도민명예회복 등 4·3 완전해결
8. 민군복합 관광미항 갈등 해결
9. 제주관광면세특구 지정
10. 제주형 녹색산업 육성

18대 대선 새누리 제주지역공약

1.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건설 추진
2.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 크루즈를 통한 관광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을 위
한 지원을 확대
3.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우수 종마 육성
 - 승마장 시설 개선 및 부대시설 현대화, 말 산업 전문인력 육성
4.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 제주시 애월항 LNG 인수기지의 차질없는 완공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5.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 고품질 감귤 생산여건 및 신제품 개발 지원
6.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 4·3 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 제주 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평가

- 탈락 5개
 - 이전 정부정책방향('녹색', '환경') 답습 3개. (환경수도, 스마트그리드, 녹색산업 등)
 - 중앙정부 조세권 관련 2개. (조세자율권, 면세특구)
- 포함 5개
 - 신공항: 도민요구 워낙 강력하여 무시 곤란. 그러나 구체적 추진은 도민과 전문가 의견 따라 하겠다는 여론
 - 해군기지: 민군 갈등 해결 ->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
 - FTA 1차산업 대책 -> 감귤과 말산업 지원으로 특정화
 - LNG: LNG발전소 -> LNG 인수기지
 - 4:3: 도민 명예회복 -> 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17대 이명박정부 제주공약

1. 제주 특별자치도의 완성
 - 법인세 12% 인하, 단계적으로 제주 전지역 면세화
2. 제2 제주국제공항 건설
 - 2010년 공항건설 착수 2017년정도에는 완공
3.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제주감귤의 경쟁력 확보
 - 산지 유통센터 30개소 건립, 감귤경쟁력 강화사업비 보조금 보조율 인상 (50→70%)
4. 동북아시아 교육중심지 육성
 -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상용하는 정주형 영어 전용타운을 조성
5.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생태관광자원화
 - 제주세계자연유산보존센터 설립, 바다목장 조성
6.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 2015년 예상전력수요 1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7.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
 - 전통마목장 복원, 세계마축제 개최 제주마문화센터 건립, 제주마산업클러스터 구축
8. 관광미항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 15만 톤 용량의 크루즈선석과 터미널 건설

이명박정부 공약과의 비교

- 전반적으로 공약 간결화 현실 상황 반영
 -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보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휴양지'로 육성!
- 법인세 인하, 전지역 면세화 등 유보: 복지재정 부족 가능성 감안
- 신공항 건설은 현실적 입장으로 후퇴. 시기 불명시
- 자연유산 및 환경 보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환경분야 배제
- 4·3공약 추가
- 해군기지 기존 입장 고수

노무현정부 제2공약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

7대 선도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지원.

제주국제공항시설의 조기 확충과 국내·외 항로 증설,

지역항공사 설립지원

제주외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및 항만의 차별화 선박의 대형화,

유통과 물류의 선진시스템 구축,

평화의 섬 조기 지정,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제도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첨단 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
생물자원화지원센터 건립과 청정 바이오 기술연구 센터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지방대학 관련학과의 육성 지원 및 인력관리종합시스템 구축 등

△제주형 농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제주의 생명사업인 감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감귤농가의 소득증대 지원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2천억원 조성.

청정·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발농업직불제 도입과 농산물예시가격제 실시, 수급안정기금 조성 등으로 발농업의 생산과 유통지원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장기 분할상환 및 금리인하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 등을 통해 어업자원 확보 등 신해양시대 개척을 위한 해양·수산업 육성

노무현정부 제주공약

△관광산업 발전

전체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 스포츠 등이 결합된 복합관광 산업을 발전
국제회의도시 지정과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사업 육성, 관광진흥지역 제도정비 및 확충과 생태관광 자
원을 활용한 복합관광자원 개발

‘종합스포츠 훈련센터’ 건립을 추진

관광인프라 시설인 동부관광도로의 조기확장

△선진화된 환경관리체제 구축

선진국 수준의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Clean제주’를 조성
환경관리시범도 지정과 환경교육 모델도시 조성, 한라산의 훼손지 복구와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등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제주의 ‘클린토피아 추진계획’ 지원

△여성인력 활용 및 사회복지의 확충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보건서비스 향상.

여성창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성의 창업지원과 제주여성프라자 건립 지원 및 제주여성의 정체성
확립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잠수어업인 산재보험 제도화. 사회복지시스템 확대와 안정적 보건의료자원 확보 등

△문화제주 구현

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지원과 영상산업 이벤트 개최 및 민자유치를 통해 오픈세트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영상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제주도 고유문화예술품을 보존·발전시키고 문화산업을 육성

향토문화예술과 문화재의 발굴·보전 지원 제주소립미술관 조기 건립 및 ‘제주종합 문화예술타운’ 건립.

△4·3사건 조속 해결

4·3문제를 완전히 매듭. 2003년 대통령 4·3위령제 참석

희생자 사실조사 심사와 진상규명 완료, 4·3위령공원 조성사업의 조기 완성 등

핵심 공약 반영 전략??

1. 기존의 제주지역 대선공약을 제주도 정책에 실현하는 전략?
 - 지금까지의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관련 정책의 패도 수정 필요!
2. 제주지역 공약을 제주도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
 - 제주도와 도민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인식해서 공약 달성에 협조하는 대신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최대한 유치.
 - 이를 위해 새정부의 전체 공약 재음미 필요

새누리 10대 공약

1. **가계부담 덜기**
 - 신용카드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2.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3. **교육비 걱정 덜기**
 - 고등학교 무상 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5.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스펙조율시스템 마련,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6.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 60세로 정년 연장, 해고 요건 강화
 -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7.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8.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9.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10. **지역균형발전과 대та평 인사**

복지정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 국제자유도시전략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 시나리오 1

-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재정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복지시책 집행-> 지방재정 악화, 여타사업 축소, 재정자립도 하락. 국제자유도시 후퇴
-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재정 충당을 위한 세금 인상

• 시나리오 2

- 복지행정수요를 근원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 개발 -현재의 공약은 모두 복지공급 확대 정책에 치중
 - 예: 종교단체의 공동체 상호부조사업 개발 확대
- 자체 재정수입 증대 방안 도모

실천전략

- 제주 해군기지의 중앙정부 필요성 최대한 활용
 - 주변국과 외교전략상 및 국민통합차원에서 단순 군사기지보다는 동북아 해난구조기지로서 발전. 이에 필요한 첨단장비 및 시설 투자와 관련 연구소, 등 유치 패키지 개발 제안
- 신공항은 정부의 복지 재정 압박을 고려해서 민자추진 방안 검토
 - 기존 공항부지는 국제물류기업에게 일괄 매각 또는 장기 임차해서 동북아 항공물류기지로 개발토록 함.
 - 신공항 민자추진 초기 자본투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면세점 사업 유통대기업과 공항공사 참여 유치
- 대기업 본사 및 사업본부 제주 유치 활동 강화
 -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규제 강화와 법인세 조세 강화에 따라 국내 대기업 사업본부 해외 진출 증가 예상
- 향토 특성화 학교 설립 인가 확대
 - 특별법상의 제주교육자치권(학교설립 인가권 및 감독권 등 제주 이양) 활용해서 기업이나 개인 설립의 독창적 프로그램 학교 유치 확대(예: 해녀학교, 희귀동식물 배양학교, 각종 음식/패션/공방 학교 등). 교직외 다양한 자격 교사 채용 허용
 - 제주학생의 육지학교 진학 교육비 절감대책, 제주도내 일자리 창출, 외부 전문가 제로도 유입 증가 효과
- 제주경제 및 산업정책을 복지정책의 틀로 재편성
 - 1차산업 대책을 농어민 개인의 의료/주거/생활복지 향상 프로그램으로 개편
 - 영세 건설업, 관광업, 음식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세민 추락 방지 프로그램 도입 (예: 민간 전문가 pool인종제, M&A 인센티브 지급 등)
- 4대 중증질환 도내 진료 및 요양 시설 투자 확대
 -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에 따라 육지부 병원으로 의료비 유출 증가 예상

JDI 제주미래포럼 개최 경과

제1회 제주미래포럼

「정부의 미래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 일시 : 2008년 6월 20일(금) 15:00~18:10
- 장소 :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5층(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기조강연

- 정부의 미래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 **현인택**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고려대 교수

□ 주제발표

- 미래비전수립의 필요성
 - **이홍재**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 안양대 교수
- 제주의 미래비전과 전략
 -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2회 제주미래포럼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관광」

- 일시 : 2008년 8월 19일(화) 15:00~17:30
- 장소 :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5층(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

- 신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관광의 대응전략
 - **김철원**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제3회 제주미래포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주요 경제 분야 대응방안」

- 일시 : 2008. 12. 19(금) 15 : 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4층)

□ 기조강연

- 정부의 경제정책과 제주의 대응 전략
 - 박청원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단장

□ 주제발표

-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 좌장 : 이상봉 제주대 경상대학장
 - 발표 : 고성규 JDC투자사업본부장
-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좌장 : 박상수 제주관광대 교수
 - 발표 : 오상훈 제주대 교수
- 1차산업 발전 방안
 - 좌장 : 송창길 제주대 교수
 - 발표 : 고성보 제주대 교수

제4회 제주미래포럼

「제주의 녹색성장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 일시 : 2009년 4월 23일(목) 14 : 00~18 : 00
- 장소 : 제주그랜드호텔

□ 주제발표

-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정책 전략
 - 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녹색성장과 산업
 -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 녹색성장과 제주의 에너지정책
 - 주복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장
- 녹색성장과 제주의 1차 산업
 - 고성보 제주대학교 교수
- 기후변화와 국토 및 도시정책
 - 김명수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후변화와 제주의 관광정책
 - 김의근 탐라대학교 교수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
 -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주지역 1차년도 연구성과
 - 이병걸 제주대학교 교수

제5회 제주미래포럼

「제주지역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 일시 : 2009년 12월 1일(화) 13 : 30~18 : 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

□ 주제발표

- 제주도 도로여건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방안
 -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주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현황 및 효과
 - 이상수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조사팀장
- 제주지역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사고감소 방안
 - 안병준 (전)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제6회 제주미래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과제」

○ 일시 : 2010년 10월 12일(화) 15:00~18:2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

□ 기초강연

-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 주제발표

- 수출 1조원 시대를 위한 정책적 구상
 - **이용완**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제주지역 수산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
 -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방안
 - **김기옥**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센터 실장

제7회 제주미래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용암해수 산업화 성공전략과 과제」

○ 일시 : 2011년 2월 22일(화) 15:00~18: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

- 용암해수 특성과 시장경쟁력
 - **김현원** 연세대학교 교수
- 용암해수사업 추진상황과 성공전략
 - **김병호** 제주테크노파크 박사
- 용암해수 사업 성공을 위한 추진체제
 -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8회 제주미래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성공전략과 과제」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15:00~18: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육성전략
 - 황수성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 제주지역 해상풍력발전 추진전망과 과제
 - 김일환 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지역 태양광에너지 산업화와 과제
 - 유권종 한국에너지연구원 태양광센터장

제9회 제주미래포럼

「중국시장 변화에 따른 제주의 대응전략」

○ 일시 : 2011년 9월 6일(화) 15: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 주제발표

- 중국과의 관광교류 및 관광객 유치 전략
 -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
-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와 틈새시장 탐색
 -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박사

제10회 제주미래포럼

「제주다운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 일시 : 2011년 9월 30일(금) 15: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4층

□ 주제발표

- 제주 도시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건축물 고도규제를 중심으로
 -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제주지역 고도 및 녹지지역 관리방안
 -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11회 제주미래포럼

「관광객 800만시대의 제주관광이 나아갈 길은?」

- 일시 : 2011년 11월 25일(금) 15:00 ~ 18: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 주제발표

- 제주 MICE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
 - 김명현 한국은행제주본부 경제조사팀과장
-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한 제주관광의 과제
 -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주지역 생태관광 육성 전략
 -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12회 제주미래포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I);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의 산업·경제분야 변화」

- 일시 : 2012년 4월 12일(목) 15:00~18: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 주제발표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응전략
 - 이견직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의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 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 경영기획부 박사

제13회 제주미래포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II);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의 고용·교육분야 변화」

- 일시 : 2012년 5월 30일(수) 15:00~18:00
- 장소 : 제주발전연구원 중회의실

□ 주제발표

-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 노인고용의 대응전략과 과제
 - 고승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장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
 - 김기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 박사

제14회 제주미래포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Ⅲ)

100세 시대 도래와 가족·건강분야

- 일시 : 2012년 9월 26일(수) 15:00~18:00
- 장소 : 제주발전연구원 중회의실

□ 주제발표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 가족구조의 변화와 향후 가족정책과제
 - 김혜숙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과 교수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방안
 -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제15회 제주미래포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Ⅳ)

100세 시대 도래와 여가·문화분야

- 일시 : 2012년 10월 30일(화) 15:00~18:00
- 장소 : 제주발전연구원 중회의실

□ 주제발표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여가·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 최석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지역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 정책
 - 김화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연구사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